

현대자본주의국가투융자정책의 기만성

김 창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것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77페이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현대자본주의국가들의 재정활동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것의 하나는 국가재정활동이 금융적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것이다.

원래 재정과 금융의 차이로 하여 국가의 재정활동과 금융활동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즉 재정은 국가의 기능수행과 관련되어있고 금융은 자금유통과 관련되어있는것이다. 국가재정활동을 반영한 예산은 그 지출에서 불반환적이라면 금융활동은 대부형식으로 반환적성격을 띠는 자금활동이다.

그런데 오늘 자본주의국가재정활동은 적지 않은 경우 금융적성격을 띠고있다. 그러한 사실은 재정투융자에서 찾아볼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재정투융자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경제시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진행되는 국가예산지출이다. 재정투융자가운데서 투자는 기본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지출이며 융자는 대부형태로 진행되는 예산지출이다. 일반예산(기본예산)과 구별하여 《제2의 예산》이라고 하는 재정투융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세금수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적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정부기업, 지방자치단체기업,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출자, 융자하는 활동이 바로 재정투융자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투융자활동이 본격화된것은 1929—1933년의 세계경제공황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경제를 국가가 조절한다고 하는 《경기적재정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투융자는 현대자본주의나라정부들의 새로운 재정활동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정부의 재정활동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도이칠란드나 일본처럼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뒤늦게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자본축적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세금수입에 재정원천을 둔 신용형태인 공적신용이 적지 않게 제공되였었다.

현대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재정투융자는 날이 갈수록 팽창되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일반예산으로는 부담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반영하여 국가예산의 보충형태로 출현하였다.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들어서서 부르쥬아국가는 독점재벌들과 유착되어있기때문에 그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강화해나갔다. 이를 위하여 재정투융자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가 예산제도상의 제약을 적게 받게 되어있으며 국회의 통제밖에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지원의 여지를 주고있다. 그러한 대표적

인 나라가 일본이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953년부터 《재정투융자자금계획》을 세워놓고 재정투자를 실시하였는데 이 계획은 국회에 제출되지만 채택대상으로는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일반예산(기본예산)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일반예산대상이던 사업을 재정투융자대상으로 만들면 자금보충도 받게 되고 국회의 통제도 덜 받게 된다. 이것은 재정투융자를 리용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을 늘일수 있는 재정적공간을 정부가 더 많이 가지는것으로 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일반예산의 투융자화경향》이 높아지고 일반예산과 투융자의 호상 보충작용이 강화되고있다.

현대자본주의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재정투융자는 그 운영방식과 역할에 따라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실례로 영국에서는 국가대부기금이, 미국에서는련방신용계획이, 프랑스에서는 경제사회개발기금과 예금신탁금고가, 도이쉴란드에서는 유럽부흥계획특별재산과 부흥금융공사가, 일본에서는 재무성 리재국이 운영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재정투융자정책의 기만성은 첫째로, 재정투융자의 지출대상에서 나타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재정투융자의 지출대상을 정확히 가려보는것은 자본주의국가투융자정책의 기만성을 밝혀내는 기준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재정투융자가 마치도 사회적자본의 건전한 발전, 중소기업, 기간산업의 발전에 있는듯이 선전되고있으나 사실은 국가독점자본주의시책을 더 잘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데로 지향되고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투융자의 지출대상은 산업에 대한 투융자, 공공시설에 대한 투융자, 금융사업에 대한 투융자 등으로 되어있다.

산업에 대한 투융자속에는 《관영》기업체들의 운영을 위한 경제행정비, 사독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여러가지 보조금, 식민지운영비, 자원개발비, 산업보조비 등이 포함된다.

《관영》기업체들의 운영을 위한 경제행정비에는 경제의 군사화를 밀받침하는데 필요한 산업기술보조비, 전략물자의 조사비, 기술자양성비, 중소기업, 민수산업을 제한통제하며 간섭하기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비용들은 모두 독점자본이 경제의 군사화를 위하여 저들의 자본을 집중시키고 고물리운을 짜낼수 있는 투자대상을 재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출이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통제하며 간섭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자본주의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새로운 연구개발성과들이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나오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효과가 높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총수에서 거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며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에는 기업총수의 99%에 맞먹는 2 000여만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그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액의 39%, 판매액의 53.5%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유럽동맹에는 기업총수의 99.5%에 맞먹는 1 792만 4 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그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액의 55%, 일자리수의 70%를 담당하고있다고 한다.

이런데로부터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독점들에 종속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대부와 모험투자제도를 통하여 국가적인 자금보장대책을 세우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매해 100억US\$를 투자하여 중소기업기술갱신계획을 추

진하고있으며 지방예산의 2.5%를 중소기업의 기술갱신활동을 지원하는데 돌리고있다고 한다. 유럽동맹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다양화하고 유럽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 나라들과의 국제적협조를 실현하는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대부방식으로 융자해주었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사독점기업들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여러가지 보조금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출자에 대한 수출보조금, 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수출을 늘일 목적으로 수출품생산자본가에게 특혜적인 자금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수출보조금 혹은 수출장려금이다. 이 수출보조금의 원천은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세금으로 이루어졌거나 국채발행수입금이다. 이 자금은 수출업자에게 높은 리운을 보장하며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다른 나라 시장에 대한 침투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고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투융자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설 및 보수에 대한 투융자이다. 이 투융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는 도로, 운하, 항만, 다리, 공원, 주택, 하수도 등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것 같이 위장하고있으나 사실은 독점자본가들에게 투자대상과 국내상품시장을 인공적으로 조성하여줌으로써 그들이 고블리운을 획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자금의 방출형태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과잉저장된 생산물을 실현할수 있는 시장을 넓혀주며 독점자본가들의 생산시설, 토지를 보호하는데 예산자금을 투하함으로써 그들의 땅값을 올려주고있다.

현시기 공공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지방예산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리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설 및 보수비용을 중앙예산에서 지출하는것보다 지방예산에서 하는것이 합리적인것으로 되어있기때문이다.

지방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정권의 일상적인 기능수행 및 재산관리와 관련되는 비용이 지출되고 특별회계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융자가 진행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심화로 하여 사독점기업들에 대한 투융자보다 그 규모와 대상이 점점 작아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금융독점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의 규모를 늘이고 공공부문(교육, 보건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긴축정책이 실시되고있다. 영국에서는 2008년 10월에 3대은행에 대한 구제금이 3 700억 £였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액은 40억 £에 달하였다. 도이칠란드에서도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구제금이 5 000억 €였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230억 €였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교육, 보건부문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항의시위가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융자가 마치 주민들의 공동적리익을 위해서 복무하는것 같이 기만하고 선전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제도의 유지, 자본가들의 착취대상으로 된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진행되는것이다. 그런데 그 지출을 부담하는것은 바로 납세자인 근로인민대중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가들은 생산물원가를 낮추고 리운을 늘이게 되는것이다.

근로자들은 투융자에 의해서 조성된 공공시설물들을 리용하는 과정에서도 투자된 자금

에 리운을 덧붙여서 보상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감당할수 없는 비싼 수업료, 비싼 의료비, 계속 뛰여오르는 집세, 전기세, 수도세 등이 다 근로자들에게 넘겨써여지는 보상금이다.

지방정권이 투용자에 의해서 조성하는 살림집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비용은 주로 공채에 의해서 마련되는데 지방정권은 집세속에 공채의 원금과 리자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을 덧붙여서 집을 세낸 주민들에게 넘겨썩운다. 이리하여 터무니없이 뛰여오르는 집세를 무는 살림집마저도 근로자들의 수요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용자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관계없이 모두 인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한것으로서 반인민적성격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융부문에 대한 투용자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환자기금을 비롯한 관영 또는 비관영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용자이며 이 금융기관들은 국가주문을 받은 독점자본에 낮은 리자로 융자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는 개별적인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개발은행들이 있을뿐아니라 국제금융기구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이 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 있는 개발은행들과 제국주의국가들이 만들어놓은 국제금융기구들은 모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금융적지배와 략탈을 일삼는 금융기관이다. 실례로 영련방개발공사는 경제개발을 위한 융자의 간판밑에 영련방에 가입한 나라들의 경제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한 영국의 국가금융기관이다. 이 공사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급격히 붕괴된 새로운 역사적조건에서 식민지은행을 대신하여 영련방에 가입한 나라들에 대한 금융적지배와 략탈을 목적으로 창설된것으로서 철저한 신식민주의도구이다. 이 공사는 영국정부가 제공해준 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영련방에 속한 나라들의 관영 또는 민간기업들과의 합영, 단독기업창설, 현지기업의 주식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로 영국의 독점기업들에 필요한 광물자원과 농산물을 략탈하는데 투자를 집중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재정투용자정책의 기만성은 둘째로, 재정투용자를 위한 자금원천에서 나타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투용자를 위한 자금원천을 확보하는것은 독점자본의 고률리운을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정신을 마비시키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 자금적담보로 된다. 이로부터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정투용자를 위한 자금원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투용자를 위한 자금원천은 근로인민대중으로부터 수탈한 세금과 그들의 령세저축자금, 보험료에 의한 흡수자금 그리고 정부보증채나 정부보증차입금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재정투용자를 위한 자금원천에는 우선 근로인민대중으로부터 수탈한 세금과 그들의 령세저축자금이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쵸아국가는 자기의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만으로는 국가기능수행은 물론 재정투용자를 위한 자금수요를 충당할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부르쵸아국가는 권력을 리용하여 주민들로부터 강제적방법으로 국가유지와 재정투용자에 필요한 비용을 조세로 징수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조세의 략탈적성격을 보

여주고있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재정투융자에 필요한 조세가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것으로부터 그 총액, 세금액, 세률, 징수방법들은 국가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결정되고있다. 물론 립헌제도하에서 조세는 세법에 의하여 징수되고 그 규모는 국회에서 비준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쥬아국회나 법이 자본가계급의 계급적이익의 대변자인것만큼 세법이나 조세의 국회승인은 한갓 기만에 불과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의 령세저축자금을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으로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령세저축자금을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으로 리용하게 된것은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심화로 하여 예산적자가 만성화되고 앞날에 대한 위구심으로 하여 사람들의 저축경향이 높아진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부르쥬아국가들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사람들의 위구심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저금과 기금을 형성해놓고 거기에 많은 자금을 저축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으로 리용하고있다.

근로자들의 령세저축자금에는 우편저금, 년금기금, 각종 보험료 등이 있다.

우편저금은 체신기관을 통하여 조직하는 저금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우편저금을 재정투융자의 자금원천으로 리용하게 된것은 그 저금액수가 많은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체신기관이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까지 널리 분포되어있고 우편, 전신전화, 송금, 소포 등의 봉사업무를 취급하기때문에 일상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의 령세자금을 저금에 끌어들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1992년 일본의 우편저금은 《자금운영부자금》총액가운데서 29.6%(9조 9 000억 ¥)에 달하였다.

년금기금은 년금지불의 원천으로 되는 기금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년로나 퇴직, 질병,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매년 일정한 액수의 돈을 년금형식으로 지불하는 제도가 있다. 년금기금은 이러한 년금지불을 화폐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자금원천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년금기금을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으로 리용하게 된것은 근로자들이 년금에 대한 저축경향이 높아져 년금기금총액이 커지고있으며 년금신탁을 하게 되면 년금을 신탁재산으로 운영하여 나온 리익이 신탁은행과 위탁자사이에 분배됨으로써 추가적인 리득이 생겨나기때문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년금기금은 그것을 누가 형성하는가에 따라 공적년금기금과 사적년금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년금기금은 국가에 의하여 형성되고 사적년금기금은 기업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년금기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을 위한 《자금원천》으로 되는듯이 기만하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부르쥬아국가는 근로자들의 압력에 못이겨 년금제도를 세워놓고 사회복지 《향상》의 미명하에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여 그 기금을 형성하며 그 기금을 신탁은행이나 보험회사들에 투자하여 금융시장에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리득을 얻고 있다.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에는 또한 정부보증채나 재정투융자채권과 같은 채권발

행이 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모순과 경제위기의 악화로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것은 1970년대 석유위기,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금융위기,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로 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당함으로써 그들의 담세능력이 떨어졌으며 령세저축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르쥬아국가들은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보증채나 재정투융자채권 등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정부보증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받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보증채나 재정투융자채권과 같은 채권발행으로 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을 조달받게 된것은 현시기 금융시장에서 각종 증권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업들과 개별적주민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사정과 관련된다. 정부보증채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민간자금을 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의 원금상환과 리자의 지불을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말한다. 정부보증채의 이름은 보증채를 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과 자금의 리용대상에 따라 철도채, 통화안정채, 사업채 등 여러가지로 규정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보증채는 주로 지방공공단체나 관영 및 반관영금융기관, 주식회사나 사업단체들이 발행하도록 국가법으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정부보증채의 발행액은 국회에서 예산심의와 함께 규정하거나 별도로 비준 또는 심의를 받아 규정되고있다. 재정투융자를 위한 정부보증채의 발행과 유통은 대독점들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는 주요대상들의 건설과 운영에 요구되는 자금조달을 담보하는것이므로 반인민적성격을 띠고있다.

재정투융자채권은 일본에 고유한 국채의 한 종류이다. 20세기말까지 일본에서는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원천의 구성에서 산업투자특별회계, 자금운영부자금(우편저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회수금 등), 간이보험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보증채와 정부보증차입금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1990년대초 거품경제의 폭발, 경제위기의 악화 등으로 《재정투융자계획》실현에 엄중한 자금난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 2002년에 《재정투융자개혁》을 실시하였다. 즉 우편저금, 자금운영부자금(후생연금, 국민연금, 회수금)을 주요원천으로 하던것을 없애고 재무성에서 발권은행에 의뢰하여 금융시장에 재정투융자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을 법인기업들과 지방공공단체들에 융자해주었다가 다시 회수하여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줄어드는 투융자자금의 고갈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하나 독점기업들의 자금수요를 보장해주려는 일본반동정부의 책동과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현재 자본주의세계에 범람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리용이 투융자자금조달에 유리한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재정투융자채권의 소유자들은 재무성에서 거두어들인 원금과 리익배당금을 받게 되며 투융자자금운영단위들에서는 투융자자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강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수수료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높이고있다. 결국 일본에서 새로 실시한 《재정투융자개혁》도 근로자들의 자금적부담만 높였을뿐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하였으며 투융자채권소유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 주고있다.

이처럼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투융자정책은 독점자본가들에게는 독점적 고물리율을 보장해주며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아무런 리득도 차례지지 않는 반동적이며 기만적인 재정정책의 하나이다.

실마리어 현대자본주의, 투융자정책